

동아시아에서 레짐정향의 근원: 승자-패자론 검증*

박종민**

이 논문은 레짐정향이 선거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승자-패자 가설을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검증한다. 국가수준에서 실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승자-패자 가설은 경쟁의 장이 불공정한 국가에서만 아니라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된 일부 국가에서도 확인되었다. 결과는 승자-패자 간 간격이 선거의 공정성만이 아니라 정부의 반응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도 의회제를 택한 곳보다 대통령제를 택한 곳에서 승자-패자 간 간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권력에 대한 접근성과 정부제도의 포괄성에 따라 패자의 상실감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정치신뢰, 제도신뢰, 승자-패자 간격

I. 머리말

정부제도(institutions of government)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각 대륙의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3).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참여와 문책제도가 구축

* 이 논문은 2013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수정본이다. 학술대회에서 토론해 주신 경상대 배병룡 교수 및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한다.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2012S1A3A2033282).

**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부의 질, 정부신뢰, 비교정부론 등이다(cmpark@korea.ac.kr).

되어 있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정착된 북미와 유럽 등 서구 민주주의에서도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해 왔고 이것이 좀처럼 반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Dalton 2004). 정부에 대한 불만과 냉소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순응을 낮추어 결국 체제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정부불신의 영향 요인을 이해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정부 차원에서 정부불신의 원인을 찾으려는 접근은 다양하다(Hibbing and Theiss-Morse 2001; 박종민·배정현 2011). 정책결과를 강조하는 시각은 특히 경제성장을 정부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궁핍해지면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이것이 정부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책과정을 중시하는 접근은 결과와 독립적으로 결정과 집행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한다. 정책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이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불리해도 이를 기꺼이 수용한다는 것이다. 정책산출을 강조하는 시각은 정부신뢰가 정책결과나 정책과정보다는 선택된 정책 자체와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정책의 효과가 어떠한 혹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었든 중요한 것은 선택된 정책이 시민들의 선호와 얼마나 일치하느냐는 것이다. 이들 모두는 정부신뢰의 근원으로 정부성과와 행위에 초점을 둔다.

시민 차원에서 정부불신의 원인을 찾으려는 접근은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갖는 기대 혹은 정부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정보의 내용과 질을 강조한다(Pharr and Putnam 2000; Nye et al. 1997). 전자와 관련해 가치관의 변화를 강조하는 연구는 시민들의 가치우선순위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후기물질주의 가치관의 확산으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전통적 정부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Inglehart 1999). 후자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가진 정부관련 정보의 내용과 질이 정부의 실질적인 성과보다 정부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언론 등 정보매체의 역할에 주목한다(Norris 2000).

이 논문에서 다루는 승자-패자 가설은 정치질서와 제도에 대한 평가가 선거결과와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자 혹은 정당이 승리한 유권자들은 선거결과에 만족해 레짐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지지하는 후

보자 혹은 정당이 패배한 유권자들은 선거결과에 불만족해 레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다. 레짐에 대한 평가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크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선거결과에 대한 패자들의 승복뿐만이 아니라 레짐에 대한 패자들의 지지야말로 정치안정에 긴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질서와 제도가 강압에 의해 유지되는 권위주의체제에서보다 자발적 동의에 의해 유지되는 민주주의체제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당제가 유지되고 있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경쟁선거가 실시되는 동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승자-패자 가설을 검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레짐에 대한 평가에 있어 승자-패자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차이가 국가에 따라 다르다면 왜 그런지 예비적 설명을 시도한다.

II. 승자-패자론

승자-패자론 가설의 핵심은 레짐에 대한 태도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있다는 기대이다. 레짐정향(regime orientations)은 정치적 지지의 주요 차원이다. 정치적 지지의 개념을 발전시킨 이스톤(Easton, 1965; 1975)은 지지의 대상인 체제의 구성요소를 정치공동체, 레짐 및 당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치공동체는 정치적 분업으로 결합된 개인들의 집단이다. 레짐은 권위구조와 운영원리를 가리킨다. 당국은 권위역할의 현직자들이다. 정치적 지지의 의미는 지지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공동체에 대해 지지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치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정치적 분리주의를 나타낸다. 이는 레짐에 대한 불만이나 당국에 대한 냉소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불안요소이다. 레짐에 대한 지지가 약하다는 것은 정치공동체로부터 탈퇴한다는 것이 아니라 권위구조나 운영원리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끝으로 당국에 대한 불만은 집권자들 혹은 현직자들에게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정치공동체나 레짐에 대한 거부는 아니다. 이렇게 지지의 대상을 구분한다면 당국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정치안정에 주는 영향은 레짐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정치공동체로부터의 소외감이 정치안정

에 주는 영향보다 훨씬 한정적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 현직자들을 교체해서 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레짐에 대한 불만은 선거를 통해 현직자들을 교체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정치공동체로부터 탈퇴하려는 분리주의자들의 불만은 권위구조나 운영원리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레짐에 대한 불만이 당국에 대한 불만보다, 그리고 정치공동체에 대한 불만이 레짐에 대한 불만보다 더 심각한 도전인 것이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주기적 선거를 통해 집권자들이 교체된다면 당국에 대한 신뢰는 주기적으로 재생될 수 있다. 설사 패자들이 새로 집권한 행정부(administration)에 불만을 갖는다 해도 다음 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집권에 성공하면 당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짐에 대한 불만은 집권행정부에 대한 것과 다르다. 패자가 레짐의 정당성에 도전하고 지지를 철회한다면 이는 권위구조와 운영원리를 바꾸지 않고는 해소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승자-패자 구분이 레짐에 대한 지지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지지의 대상으로 레짐에 초점을 둔다. 레짐정향은 3개의 하위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레짐가치와 원리(regime values and principles)에 대한 승인, 레짐성과(regime performance)에 대한 평가 및 레짐제도(regime institutions)에 대한 신뢰가 포함된다(Norris 1999; 2011). 후술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레짐가치에 대한 지지와 레짐제도에 대한 신뢰를 통해 레짐정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앤더슨과 그의 동료들은 레짐에 대한 승자들과 패자들의 평가가 다를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Anderson et al. 2005; Anderson and Lotempio 2002; Anderson and Tverdova 2001).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소개하면 첫째, 효용극대화이론은 승자-패자 간 간격이 선거승패가 유권자들에게 주는 기대편익과 관련된다고 본다. 승리의 기대효용이 패배의 기대효용보다 높기 때문에 승리는 패배보다 정부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패배는 패자들에게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 승리를 담보하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둘째, 감정반응이론은 보다 일반적인 심리적 기제가 작동한다고 본다. 즉 승패는 정서적 혹은 감정적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데 패배는 분노를 야기하고 승리는 희열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당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선거결과에 환호하고 따라서 그러한 선거결과를 만들어 낸 제도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낙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선거결과에 우울해지고 따라서 제도에 대해 냉소적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인지조화이론은 승리와 패배가 감정만이 아니라 인지에도 영향을 주는데 패배한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부조화를 피하려는 인지과정에 따라 제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지부조화가 발생하면 심리적 불안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 하는데 패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한 후보자 혹은 정당을 패배하게 만든 제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다. 미시수준에서 어떤 인과기제가 작동하든 전술한 논의들은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정치적 소수파에 속하는 개인들이 다수파에 속하는 개인들보다 레짐에 대해 더 부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더 나아가 앤더슨과 그의 동료들은 미시수준에서 인과기제에 의해 생성된 승자-패자 간 간격이 거시수준의 체제 특성들에 의해 증폭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Anderson et al. 2005; Anderson and Guillory 1997). 민주주의의 본질은 게임의 결과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데 있어 핵심 요소가 게임의 결과의 불확실성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Przeworski 1986). 선거에서 승리할 기회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권위구조와 운영원리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쟁취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전혀 없는 패자들은 그러한 체제를 지지할 유인이 없으며 기존의 권위구조와 운영원리에 도전하고 게임의 결과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는 레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처럼 승자-패자 간 간격은 체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권교체와 권력접근이 보다 용이한 체제에서는 그렇지 못한 체제에서보다 승자-패자 간 간격이 작을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체제가 승자와 패자가 만 들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권력이 행사되는 과정도 규정한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패배를 경험한 유권자들이라도 선거 후 정부권력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면 레짐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반면 정부권력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

면 레짐에 대한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 집권정부가 패자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권력이 승자와 패자들에게 공정하게 행사된다면 이는 패자의 상실감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체제의 특성에 따라 패배의 결과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승자-패자 간 간격이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

전술한 선행이론과 연구를 고려해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려고 한다. 첫째, 레짐에 대한 태도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있는가? 둘째,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체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Ⅲ. 자료와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3차 아시아바로미터조사(Asian Barometer Survey III)의 동아시아 9개국(일본, 한국, 몽고,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설문자료이다. 각국의 전국표본 면접조사는 대만(N=1,592), 필리핀(N=1,200), 몽고(N=1,210) 싱가포르(N=1,000), 태국(N=1,512)의 경우 2010년에, 한국(N=1,207), 인도네시아(N=1,550), 일본(N=1,880), 말레이시아(N=1,214)의 경우 2011년에 각각 실시되었다.¹⁾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기 위해 “지난 (전국)선거”에서 어떤 후보자 혹은 정당에 투표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²⁾ 조사 당시 “지난 선거”

1) 분석에서는 Freedom House의 자유점수를 고려해 일본, 한국, 대만, 몽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은 민주주의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레비츠키·웨이(Levitsky and Way, 2010)의 개념을 차용해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 regimes)로 분류하였다.

2) 승자와 패자로 분류된 응답자들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의 경우 Democratic Party of Japan, Social Democratic Party, People's New Party 투표자들은 승자로, Liberal Democratic Party, New Komeito, Minna, Japanese Communist Party 투표자들은 패자로 분류하였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후보 투표자들은 승자로, 정동영,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후보 투표자들은 패자로 분류하였다. 몽고의 경우 Tsakhiagiin Elbegdorj 후보 투표자들은 승자로, Nambaryn Enkhbayar 후보 투표자들은 패자로 분류하였다. 필리핀의 경우 Maria Gloria Macapagal-Arroyo 투표자들은 승자로, Fernando Poe, Jr., Panfilo Lason, Raul Roco, Eddie Villanueva 투표자들은 패자로 분류하였다. 대만의 경우 Ma Ying-jeou 후보 투표자들은 승

로 간주된 선거는 일본의 경우 2009년 중의원선거, 한국의 경우 2007년 대통령선거, 몽고의 경우 2009년 대통령선거, 필리핀의 경우 2004년 대통령선거, 대만의 경우 2008년 총통선거, 태국의 경우 2007년 의회선거,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9년 의회선거,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8년 의회선거이다.³⁾ 싱가포르 조사에서는 이 질문이 누락되어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을 활용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였다.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레짐정향은 레짐가치에 대한 지지와 레짐제도에 대한 신뢰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Norris 2011). 전자는 다음의 3개 동의-부동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전반적으로 나는 우리의 정치체제가 자랑스럽다; (2) 우리의 정치체제는 문제가 생긴다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만하다; (3) 나는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우리 정치체제하에 살고 싶다.⁴⁾ 이들 문항에 동의하는 응답자들은 레짐가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후자는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정부) 각각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응답범주는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으로 처음 2개 범주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각 레짐제도를 신뢰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자료, Hsieh Chang-ting 후보 투표자들은 패자로 분류하였다. 태국의 경우 Phak Palang Prachacho, Phak Pracharat, Phak Chart Thai, Phak Pua Paendin, Phak Matchima Thippathai 투표자들은 승자로, Phak Prachatipat(Democratic Party), Park Bhum Jai Thai 투표자들은 패자로 분류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Democratic Party Coalition(Democratic Party(PD), PKS, PAN, PPP, PKB) 투표자들은 승자로, Ten-party Coalition(Golkar, PDI-P, Gerindra, Hanura, PDS, PBR, PKNU, PPRN, Labor Party, PPNUI) 및 기타 정당 투표자들은 패자로 분류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Barisan Nasional(UMNO, MCA, MIC, Gerakan, PBS, PBB, SUPP) 투표자들은 승자로, Barisan Pakyat(PAS, PKR, DAP) 투표자들은 패자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People's Action Party를 지지자들은 승자로, Workers' Party 등 다른 정당 지지자들은 패자로 분류하였다(Lin, Wu and Lee 2013).

- 3) 비록 회고적이지만 지지한 후보자 혹은 정당을 묻는 선거의 시점이 레짐정향을 측정한 시점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레짐정향이 승자-패자의 지위를 결정하기보다 그 반대로 후자가 전자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 4) 각국이 공유한 이들 문항의 영어버전은 다음과 같다: (1) Thinking in general, I am proud of our system of government; (2) A system like ours, even if it runs into problems, deserves the people's support; (3) I would rather live under our system of government than any other that I can think of.

Ⅳ. 승자-패자 간격

1. 레짐가치 지지

<표 1>은 레짐가치에 대한 지지를 구성하는 각 문항에 있어 승자-패자 간 반응 차이를 국가별로 보여준다. 먼저 현 체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을 보면 일본, 몽고, 인도네시아, 태국의 경우 승자와 패자 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몽고의 경우 승자든 패자든 체제에 대한 자부심은 낮지만 이들 간에 차이는 없어 패자와 승자 모두 현 체제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 승자와 패자 간에 차이는 없지만 이들 모두 체제에 대한 자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말레이시아로 승자 10명 중 9명이 현 체제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반면 패자 2명 중 1명만이 현 체제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큰 나라는 대만이었으며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이 순차적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나라에서는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최저 10퍼센트(한국)에서 최고 23퍼센트(대만)였다. 대만과 필리핀의 경우 승자의 경우 과반 이상이, 그리고 패자의 경우 과반 이하만이 체제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승자와 패자 모두 과반 이하만이 현 체제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승자와 패자 모두 과반 이상이 그러하였다.

둘째, 현 체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만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또 다시 말레이시아였다. 여기서는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무려 35퍼센트에 이르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패자의 경우도 과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현 체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만하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큰 나라는 또 다시 대만으로 승자 3명 중 2명이 현 체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만하다고 응답한 반면 패자 5명 중 2명만이 그러하였다. 대만에 이어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큰 나라는 한국으로 10퍼센트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일본, 몽고,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는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2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경우 승자와 패자 모두 과반 이하만이 현 체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만하다고 한 반면 몽고, 인도네시아, 태국의 경우 승자와 패자 모두 과반 이상이 그러하였다.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경우도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7퍼센트 이하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체제에 대한 자부심 질문에서보다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필리핀의 경우 11퍼센트, 싱가포르의 경우 5퍼센트 더 적었다.

<표 1> 레짐가치 지지에서 승자-패자 차이

	현 정치체제가 자랑스럽다			현 정치체제는 지지를 받을만하다			현 정치체제하에서 살고 싶다		
	승자	패자	차이	승자	패자	차이	승자	패자	차이
민주주의									
일본	40	39	+1	39	37	+2	70	65	+5
한국	33	23	+10	32	21	+11	50	39	+11
대만	50	27	+23	62	40	+22	72	51	+21
몽고	48	43	+5	62	62	+0	56	59	-3
인도네시아	72	69	+3	81	79	+2	78	77	+1
태국	82	85	-3	90	90	-0	88	91	-3
필리핀	55	39	+16	80	75	+5	69	57	+12
경쟁적 권위주의									
말레이시아	89	51	+38	87	53	+34	90	65	+35
싱가포르	97	85	+12	89	82	+7	92	76	+16

수치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퍼센트. 차이는 승자(%) - 패자(%).

자료: Asian Barometer Survey III

셋째,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현 체제 하에서 살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또 다시 말레이시아였다. 승자와 패자 모두 과반 이상이 다른 대안보다 현 체제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들 간의 차이는 무려 35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큰 나라는 또 다시 대만이었다. 승자의 4분의 3 이상이 현 체제 하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패자의 5분의 3 정도가 그렇게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패자도 과반은 현

체제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이 순차적으로 대만의 뒤를 이었다. 이들 나라에서는 모두 10퍼센트 이상승자와 패자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의 경우 승자와 패자 모두 과반 이상이 현 체제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경우 패자의 과반 이하만이 현 체제 하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한편 일본, 몽고,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승자와 패자 간 차이는 5퍼센트 이내로 적었다. 뿐만 아니라 승자와 패자 모두 과반 이상이 현 체제보다 나은 대안은 없다고 믿고 있었다.

레짐가치에 대한 지지를 측정하는 각 문항에 대한 분석은 현 레짐에 대한 지지와 헌신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국가별로 상이함을 보여준다. 승자에 비해 패자의 현 레짐에 대한 지지가 주목할 만하게 지속적으로 낮은 나라는 말레이시아로 3개 문항 모두에서 34-38퍼센트의 차이를 보였다. 말레이시아와 이웃한 싱가포르의 경우 체제성격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7-16퍼센트임을 고려하면 이는 흥미로운 발견이다. 말레이시아에 뒤이어 주목할 만한 사례는 대만으로 3개 문항 모두에서 21-23퍼센트의 차이를 기록하였다. 한편, 대만과 더불어 성공적인 민주화의 사례로 꼽히는 한국의 경우 3개 문항 모두에서 10-11퍼센트의 차이를 보였다.

레짐가치에 대한 지지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차이를 보다 간결하게 보여주기 위해 레짐가치 지지 종합지표를 구성하였다. 종합지표는 긍정적 응답을 한 문항수를 합하여 만들었는데 지표의 수치 범위는 0점에서 3점이다. <표 3>은 국가별로 승자와 패자의 평균점수 차이와 유의미성 및 관계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승자-패자 간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말레이시아였는데 2008년 의회선거에서 Barisan Nasional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Barisan Rakyat에 투표한 유권자들보다 현 레짐을 더 지지하였다. 대만의 경우도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컸는데 2008년 총통선거에서 Ma Ying-jeou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Hsieh Chang-ting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보다 현 레짐을 더 지지하였다. 이 밖에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에서도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몽고,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는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2. 레짐제도 신뢰

레짐제도에 대한 신뢰는 레짐정향이 또 다른 주요한 하위차원이다(Dalton 2004; Listhaug and Wiberg 1995).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신뢰의 대상기관은 의회(입법부), 법원(사법부) 및 정부(행정부)이다. 이들 가운데 선거결과의 영향이 가장 적은 기관은 법원으로 승자와 패자 간 법원에 대한 신뢰 차이는 다른 기관에 대한 것과 비교해 작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에 따라 선거결과가 개별 기관에 대한 신뢰에 주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제에서 대선 결과에 따라 구분되는 승자와 패자의 행정부 신뢰 차이는 의회 신뢰 차이보다 클 수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총선 결과에 따라 구분되는 승자와 패자의 행정부 신뢰 차이는 의회 신뢰 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표 2>는 삼부 각각에 대한 승자-패자 간 신뢰의 차이를 국가별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정부(행정부)에 대한 신뢰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말레이시아였다. 승자의 압도적 다수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한 반면 패자의 과반 이하만이 그렇다고 하였다. 말레이시아에 이어 대만이 두 번째로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컸는데 그 차이가 30퍼센트를 넘었다. 여기서는 승자와 패자 모두 과반 이하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하였다. 그 뒤를 이어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가 순차적으로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컸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10퍼센트의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싱가포르의 경우 승자와 패자 모두 과반 이상, 한국의 경우 양자 모두 과반 이하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하였다. 한편 필리핀의 경우 승자의 과반 이상이 그리고 패자의 과반 이하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하였다,

반면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일본의 경우 승자와 패자 간 차이는 없지만 양자 모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양자 모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는 점이다. 반면 태국의 경우 승자의 과반 이상이 정부를 신뢰하지만 패자의 경우 단지 3명 가운데 1명만이 정부를 신뢰하였다. 몽고의 경우 승자와 패자 간 정부신뢰의 차이가 레짐지지의 차이보다 다소 큰 것으로 보인다.

<표 2> 레짐제도 신뢰에서 승자-패자 차이

	정부 신뢰			국회 신뢰			법원 신뢰		
	승자	패자	차이	승자	패자	차이	승자	패자	차이
민주주의									
일본	13	14	-1	12	11	+1	54	48	+6
한국	30	14	+16	14	8	+6	41	29	+12
대만	46	15	+31	10	24	-14	35	19	+16
몽고	33	41	-8	27	29	-2	19	23	-4
인도네시아	57	57	-0	52	51	+1	53	53	-0
태국	56	53	+3	50	47	+3	64	59	+5
필리핀	52	35	+17	51	37	+14	53	34	+19
경쟁적 권위주의									
말레이시아	85	47	+38	80	42	+38	77	40	+37
싱가포르	91	77	+14	89	71	+18	89	84	+5

수치는 신뢰한다고 응답한 퍼센트. 차이는 승자(%) - 패자(%)

자료: Asian Barometer Survey III

둘째 의회에 대한 신뢰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역시 말레이시아로 승자 10명 가운데 8명이 의회를 신뢰한다고 한 반면 패자 10명 가운데 4명만이 그렇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큰 나라는 싱가포르로 승자 10가운데 9명이 의회를 신뢰한다고 한 반면 패자 10명 가운데 7명이 그렇다고 하였다. 주목할 것은 말레이시아와 달리 승자와 패자 모두 과반 이상이 의회를 신뢰한다고 한 것이다. 그 뒤를 이은 필리핀과 대만에서는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14퍼센트로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경우 승자의 과반이 입법부를 신뢰하고 패자의 과반 이하가 그렇다고 하였지만 대만의 경우 승자와 패자 모두 소수만이 입법원을 신뢰하였다. 대만의 경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승자들이 패자들보다 입법원을 덜 신뢰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를 덜 신뢰하는 반면 낙선자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를 더 신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패자와 승자 간 차이가 10퍼센트 미만인 나라는 일본, 한국, 몽고,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한국(+6%)을 제외하고 그 차이는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나타났다.

셋째, 가장 덜 정파적인 법원에 대한 신뢰를 살펴보면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여전히 말레이시아로 승자의 과반 이상이 법원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패자의 과반 이하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주목할 것은 승자와 패자 간 법원신뢰의 차이가 정부신뢰나 의회신뢰의 차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이 의회 못지않게 정치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큰 나라는 필리핀(+19%), 대만(+16%), 한국(+12%)의 순서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경우 승자의 과반 이상이 신뢰하지만 패자의 과반 이하만이 그렇다고 하였다. 대만과 한국의 경우 승자와 패자 모두 과반 이하만이 법원을 신뢰한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 몽고, 일본,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승자-패자 간 간격이 없거나 크지 않았다.

레짐제도의 신뢰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차이를 보다 간결하게 보여주기 위해 레짐제도 신뢰 종합지표를 구성하였다. 종합지표는 신뢰 반응을 준 문항의 수를 합하여 만들었는데 지표의 수치 범위는 0점에서 3점이다. <표 3>은 국가별로 승자와 패자의 평균점수 차이와 유의미성 및 관계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승자-패자와 제도신뢰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로 특히 말레이시아와 대만의 경우 그 관계가 강하였다. 반면

<표 3> 종합적 레짐정향에 있어 승자-패자 차이

	레짐가치 지지				레짐제도 신뢰			
	승자	패자	차이	eta	승자	패자	차이	eta
민주주의								
일본	1.49	1.41	+0.08	.034	0.78	0.73	+0.05	.029
한국	1.16	0.83	+0.33**	.139	0.86	0.51	+0.35**	.172
대만	1.84	1.18	+0.66**	.267	1.05	0.43	+0.62**	.281
몽고	1.67	1.64	+0.03	.011	0.79	0.92	-0.13	.068
인도네시아	2.31	2.25	+0.06	.032	1.61	1.61	+0.00	.002
태국	2.59	2.66	-0.07	.031	1.69	1.59	+0.10	.031
필리핀	2.03	1.71	+0.32**	.159	1.56	1.05	+0.51**	.213
경쟁적 권위주의								
말레이시아	2.67	1.69	+0.98**	.410	2.42	1.28	+1.14**	.395
싱가포르	2.77	2.43	+0.34**	.197	2.68	2.31	+0.37**	.173

수치는 레짐지지 혹은 제도신뢰 종합지표 평균점수. 차이는 승자(점수) - 패자(점수).

** p<.001

자료: Asian Barometer Survey III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는 승자와 패자 간 제도신뢰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 선거공정성과 정부반응성

왜 어떤 나라들에서는 레짐에 대한 태도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다음은 동일한 조사 자료를 활용해 승자와 패자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서를 제시한다. 하나는 패자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의 공정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패자들이 통치과정에서 소외감을 갖게 하는 정부의 반응성이다. 모든 후보자들과 정당들이 선거에서 평등하게 경쟁한다면 패자가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레짐을 수용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후 정책결정이 승자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패자의 이해와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승자와 패자 간 차이는 보다 적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승자-패자 간 차이를 분석한다. 선거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2개 문항을 선택하였다. 하나는 “지난 선거”의 공정성을 질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과정에서 미디어 접근의 공정성을 질문한 것이다. 첫째 질문은 본 연구에서 구분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 바로 그 선거의 공정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특정 선거에 국한되지 않은 보다 일반적으로 선거경쟁의 질에 초점을 둔 것이다.

<표 4>는 “지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승자-패자 간 인식 차이를 국가별로 제시하고 있다. 승자-패자 간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말레이시아로 나타났다. 승자 10명 가운데 9명이 의회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한 반면 패자 2명 가운데 1명이 그렇게 응답하였다. 말레이시아 바로 그 다음으로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큰 나라는 몽고였다. 몽고의 경우 레짐가치나 제도 평가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면 이러한 결과는 의외이다. 그 다음으로 승자

와 패자 간 간격이 큰 나라는 대만(+17%), 필리핀(+17%), 태국(+15%), 한국(+11%)의 순이었다. 주목할 것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가장 오랜 일본의 경우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10퍼센트 이하로 크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집단 대표선거구제로 실질적인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승자와 패자 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끝으로 주목할 것은 조사대상 국가 모두에서 패자의 과반 이상이 선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을 비롯해 한국, 대만, 몽고, 심지어 싱가포르에서 패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지난 선거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지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 선거경쟁의 불공정성이 구조적이라면 승자-패자의 지위는 보다 지속적일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지난 선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선거경쟁의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거 때 모든 정당과 후보자는 방송이나 신문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4>에 따르면 선거일만의 공정성에 대한 승자-패자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말레이시아로 승자의 다수가 선거경쟁이 공정하다고 한 반면 패자의 과반 이하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간격이 큰 나라는 싱가포르였다. “지난 선거”에 대한 평가보다 승자와 패자 간의 차이가 더 컸다. 한편 일본, 몽고, 필리핀, 태국에서는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5퍼센트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간 차이가 이들 나라들에서보다는 크지만 1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지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승자-패자 간 간격과 일반적인 선거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승자-패자 간 간격을 비교하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별 차이가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몽고, 태국, 필리핀으로 이들 나라에서는 “지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승자-패자 간 간격이 선거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승자-패자 간 간격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승자와 패자 간 인식의 차이가 덜 구조적이고 보다 일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그와 반대로 나타나 승자와 패자 간 인식의 차이가 보다 구조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거공정성에 대한 분석결

과를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발견되는 레짐정향에 있어 승자-패자 간 간격은 “지난 선거”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거경쟁의 불공정성과도 관련됨을 시사한다. 한편, 대만과 필리핀에서 발견되는 레짐정향에 있어 승자-패자 간 간격은 특정한 선거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부반응성에 대한 승자-패자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다. 정부의 정책 반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잘 반응(부응)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4>는 정부의 반응성에 있어 승자-패자 간 차이를 국가별로 제시하고 있다. 승자-패자 간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말레이시아로 나타났다. 승자의 절대 다수가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반응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패자의 과반 이하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말레이시아와 거의 비슷하게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큰 나라는 대만이었다. 승자의 과반이 정부를 반응적이라고 한 반면 패자의 소수만이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 다음으로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큰 나라는 싱가포르, 한국, 필리핀의 순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경우 승자는 과반 이상, 패자는 과반 이하가 정부의 반응성을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한국과 필리핀의 경우 승자든 패자든 모두 과반 이하만이 정부가 반응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의 경우 정부의 반응성에 있어 승자와 패자

<표 4> 선거공정성 및 정부반응성 평가에서 승자-패자 차이

	지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			선거 때 미디어 접근이 공정하다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반응적이다		
	승자	패자	차이	승자	패자	차이	승자	패자	차이
민주주의									
일본	80	82	-2	59	60	-1	37	38	-1
한국	87	76	+11	72	63	+9	37	22	+15
대만	89	72	+17	73	66	+7	51	21	+30
몽고	80	55	+25	77	78	-1	12	18	-6
인도네시아	79	72	+7	65	59	+6	43	42	+1
태국	71	56	+15	79	84	-5	37	37	+0
필리핀	70	53	+17	67	69	-2	49	39	+10
경쟁적 권위주의									
말레이시아	88	60	+28	75	46	+29	75	44	+31
싱가포르	87	80	+7	60	47	+13	66	47	+19

수치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퍼센트. 차이는 승자(%) - 패자(%)

자료: Asian Barometer Survey III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몽고의 경우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작지만 패자가 승자보다 정부 반응성을 오히려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종합지표를 사용해 레짐가치 지지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큰 나라들을 열거하면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한국, 필리핀의 순이다. 한편 레짐제도 신뢰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큰 나라들을 열거하면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의 순이다. “지난 선거”의 공정성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큰 나라들을 열거하면 말레이시아, 몽고, 필리핀, 대만, 태국의 순이다. 일반적인 선거경쟁의 공정성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큰 나라들을 열거하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의 순이다. 끝으로 정부의 반응성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큰 나라들을 열거하면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한국, 필리핀의 순이다. 레짐정향에 있어 국가 순서가 “지난 선거”의 공정성이나 일반적인 선거경쟁의 공정성에 있어 국가 순서와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보다 더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반응성에 있어 국가 순서이다. 전반적인 인상은 레짐정향에 있어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은 선거의 공정성보다 정부의 정책반응성과 더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Curini et al. 2012).

VI. 권력접근성과 제도포괄성

전술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레짐정향에 있어 승자-패자 간 차이가 선거의 공정성과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의 반응성과 관련이 있다는 단서를 제시한다. 이는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정부정책의 반응성에 영향을 주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승자-패자 간 간격이 증폭되거나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체제는 승자와 패자가 만들어지는 규칙만이 아니라 정부권력이 행사되는 방식도 규정한다. 게임의 규칙은 누가 패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패자가 정책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패자가 받는 손실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수주의 정부형태는 소수파의 권리를 덜 강조하지만 협의주의 정부형태는 소수파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

기 때문에 패자가 느끼는 상실감은 달라질 수 있다(Lijphart 1999). 권위구조와 운영원리가 다수주의를 강조하는지 혹은 비례주의를 강조하는지에 따라 권력접근성과 정부반응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패자가 경험하는 상실감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선거를 통해 패자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면 패자의 좌절감은 깊을 것이며 이는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선거 후 패자가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면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은 줄어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권교체의 경험이 없는 체제 혹은 선거경쟁이 공정하지 않은 체제의 경우 패자와 승자 간의 간격이 증폭될 것으로 기대된다(Moehler and Lindberg 2009). 이러한 기대와 일치하게 선거경쟁이 불공정하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경험이 없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유사하게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말레이시아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선거제도의 공정성이 승자-패자 간 간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함을 예증한다.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쟁적 선거가 보장된 민주국가들 중 일부에서는 승자-패자 간 간격이 크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작았다. 우선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의 경우 비록 자민당이 오랫동안 독주해 왔지만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국가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는 대만과 한국이다. 이들 나라들은 두 차례에 걸쳐 정권교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는 일본과 달리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데 아마도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와 비교해서 패자들의 상실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국가인 몽고와 태국의 경우 승자-패자 간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들 나라들은 일본과 유사하게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다.⁵⁾ 또 다른 민주국가인 필리핀의 경우 승자-패자 간 간격이 비교적 크데 필리핀은 한국과 대만처럼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통

5) 의원내각제를 택한 몽고의 경우 승자-패자 구분은 의회선거 결과가 아닌 직선으로 선출하는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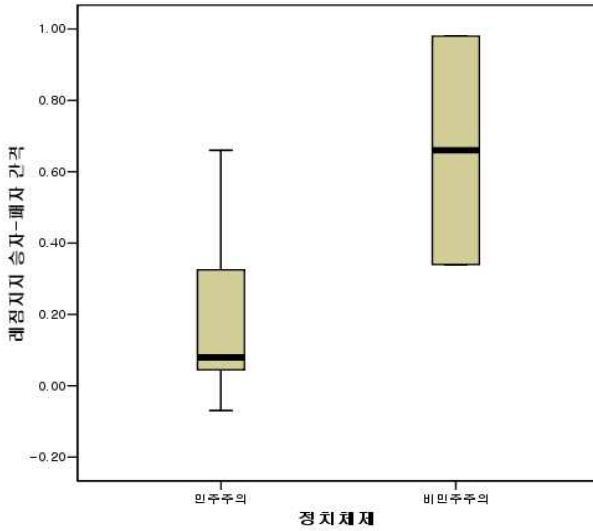
령제를 택하고 있지만 승자와 패자 간 차이가 적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에서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에서보다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⁶⁾

레짐정향에 대한 승자-패자 간 간격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나라가 선거경쟁이 공정한 선거민주주의인가 아닌가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경쟁적 권위주의에서는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보다 비민주주의에서 승자와 패자 간 간격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각 체제유형(민주주의 혹은 비민주주의)에 있어 종속변수 값의 범위, 4분위수간 및 중위수를 보여주는 <그림 1>과 <그림 2>의 박스플롯은 레짐정향에 있어 승자-패자 간격이 민주주의(N=7)보다 비민주주의(N=2)에서 더 크음을 요약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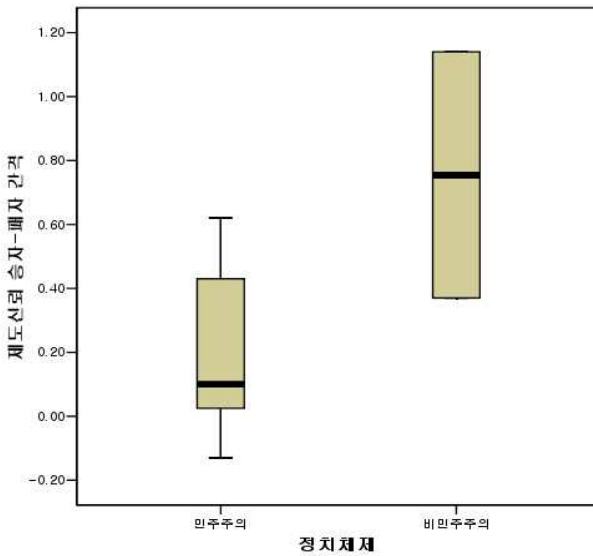
물론 이것만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 변이가 충분히 설명될 수는 없다. 앞서 제시된 것처럼 같은 선거민주주의라도 승자-패자 간 간격이 국가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만 갖고는 대만, 한국, 필리핀에서 발견되는 승자-패자 간 간격을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이들과 비교되는 것은 승자-패자 간 간격이 거의 없거나 작은 일본, 몽고, 태국이다. 두 국가 군 모두 민주주의지만 정부형태가 다르다. 각 정부형태(의원내각제 혹은 대통령중심제)에 있어 종속변수 값의 범위, 4분위수간 및 중위수를 보여주는 <그림 3>과 <그림 4>의 박스플롯은 레짐정향에 있어 승자-패자 간격이 의원내각제(N=5)보다 대통령중심제(N=4)에서 더 크음을 요약해주고 있다. 두 정부형태는 권력접근성과 제도포괄성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대통령제와 비교해 권력분산과 공유 및 정책접근성이 보다 용이하고 따라서 의원내각제를 택한 나라에서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에서보다 승자-패자 간격이 더 작은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의원내각제이지만 비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승자-패자 간격이 커 이상점(outlier)으로 표시된 말레이시아이다.

6) 대통령제를 택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승자-패자 구분은 대통령선거 결과가 아니라 의회선거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체제유형에 따른 레짐가치 지지의 승자-패자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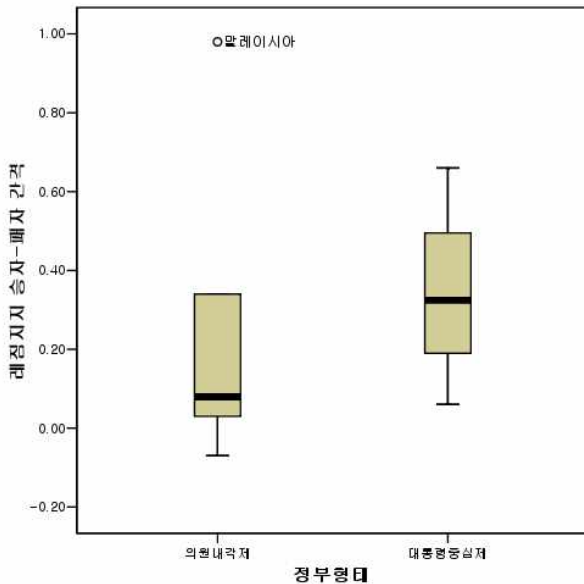
<그림 2> 체제유형에 따른 레짐제도 신뢰의 승자-패자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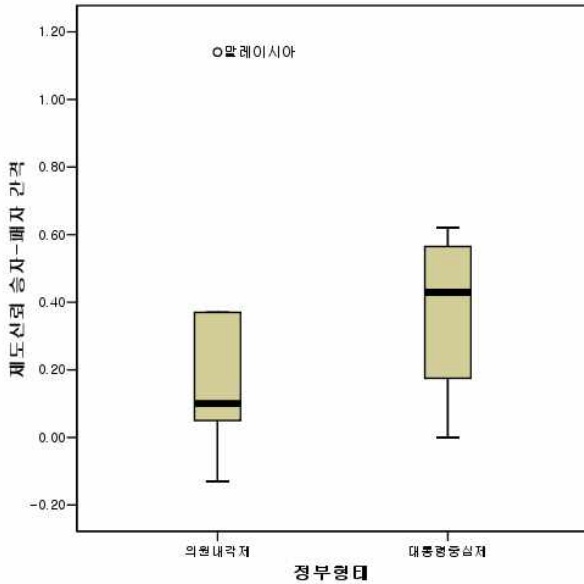
유사한 맥락에서 삼권이 분립된 대통령제를 택한 곳에서는 정부신뢰에 있어 승자-패자 간 간격이 의회신뢰에 있어 승자-패자 간 간격보다 클 수 있다. 반면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를 택한 곳에서는 정부신뢰에 있어 승자-패자 간 간격이 의회신뢰에 있어 승자-패자 간 간격과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기대와 일치하게 대통령제를 택한 한국과 대만의 경우 정부신뢰에 있어 승자-패자 간 간격이 의회신뢰에 있어 승자-패자 간 간격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내각제를 택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두 간격 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발견은 선거 후 체제운영에 대한 경험에 따라 레짐에 대한 정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과정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정책과정이 포괄적이면 승자-패자 간 간격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제도는 패자의 좌절감을 약화시키지만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제도는 패자의 좌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분석결과는 승자독식의 정부형태에서보다 합의를 중시하는 정부형태에서 승자-패자 간 간격이 좁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 정부형태에 따른 레짐가치 지지의 승자-패자 차이



<그림 4> 정부형태에 따른 레짐제도 신뢰의 승자-패자 차이



VII. 맺음말

민주정치에서 선거승리와 패배는 일상적인 일이다. 그것은 민주정치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선거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이들이 선거결과에 대해 만족과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선거결과에 불만을 가진 패자들이 체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치안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승자와 패자 간 레짐정향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체제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일단의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미시수준에서 개인들 간의 변이를 설명하는 것보다 국가수준에서 승자와 패자 간 차이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사례 국가 수의 제한으로 정교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기초적인 통계방식을 활용해 설명의 단서를 찾는데 집중하였다.

승자-패자 가설은 선거결과가 패자들의 정치적 지지, 특히 레짐 차원의 지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승자-패자 가설은 일부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확인되었다. 주목되는 사례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결여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만과 한국에서도, 그리고 불안정하지만 선거민주주의로 간주되는 필리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의 가장 오랜 민주주의인 일본 및 신생 민주주의인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승자-패자 간 간격이 확인되지 않았다. 몽고의 경우 부분적으로 발견되었을 뿐이다.

분석결과는 체제의 특성에 따라 승자-패자 간 간격이 달라질 수 있음도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레짐가치와 제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승자-패자 간 간격의 국가 순서는 선거경쟁의 공정성 평가에 있어 승자-패자 간 간격의 국가 순서와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보다 더 일치성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반응성 평가에 있어 승자-패자 간 간격의 국가 순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레짐정향과 관련해 승자와 패자 간의 차이가 선거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정부의 반응성과 관련됨을 보여주며 이는 체제의 특성에 따라 승자-패자 간 간격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승자-패자 간 간격의 국가별 차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보장된 민주주의인가 아닌가에 따라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같은 민주주의라도 내각책임제를 택한 곳보다 대통령중심제를 택한 곳에서 승자-패자 간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권력에 대한 접근성과 정부제도의 포괄성에 따라 패자의 상실감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특징은 선거결과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할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레짐에 대한 순응과 지지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쟁취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시민들은 레짐을 수용하고 지지할 유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승자-패자 간 간격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설사 선거가 공정하다하여도 승자와 더불어 패

자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승자-패자 간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참여적이고 포괄적인 정치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박종민·배정현. 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117-142.
- Anderson, Christopher J. Andre Blais, Shaun Bowler, Todd Donovan, and Ola Listhaug. 2005. *Losers' Consent: Elections and Democracy Legitim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nderson, Christopher J. and Andrew J. Lotempio. 2002. “Winning, Losing, and Political Trust in Americ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2): 335-51.
- Anderson, Christopher J. and Christine A. Guillory. 1997. “Political Institution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Cross-National Analysis of Consensus and Majoritarian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1): 66-81.
- Anderson, Christopher J. and Yuliya V. Tverdova. 2001. “Winners and Losers and Attitudes about Government in Contemporary Democraci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4): 321-338.
- Curini, Luigi, Willy Jou and Vincenzo Memoli. 2012.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the Winner/Loser Debate: The Role of Policy Preferences and Past Experie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2): 241-61.
- Dalton, Russell J. 2004. *Democratic Challenges, Democratic Choices: The Erosion of Political Suppor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aston, David. 1965. *A System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3. “Rebels without a cause: What the upsurge in protest movements means for global politics.” <http://www.battleofideas.org.uk/documents/RebelsWeb.pdf>.
- Hibbing, John R. and Elizabeth Theiss-Morse, eds. 2001.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99. “Postmodernization Erodes Respect for Authority, but Increases Support for Democracy.” In Pippa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tsky, Steven and Lucan A. Way. 2010.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 Tse-Min, Chin-En Wu and Feng-Yu Lee. 2013. "Winner-Loser Gap and Democratic Legitimacy." Paper prepared for Asian Barometer Conference on Democracy and Citizen Politics in East Asia, June 17-18, Taipei, Taiwan.
- Lijphart, Arend.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sthaug, Ola and Matti Wiberg. 1995. "Confidence in Political and Private Institutions." In Hans-Dieter Klingeman and Dieter Fuchs, eds. *Citizens and th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ehler, Devra C. and Staffan I. Lindberg. 2009. "Narrowing the Legitimacy Gap: Turnovers as a Cause of Democratic Consolidation," *Journal of Politics* 71(4): 1448-66.
- Norris, Pippa.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orris, Pippa. 2000. "The Impact of Television on Civic Malaise." In Susan J. Pharr and Robert D.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orris, Pippa. 2011. *Democratic Deficit: Critical Citizens Revisi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ye, Joseph S.,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 eds.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harr, Susan J. and Robert D. Putnam, eds. 2000.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1986. "Some Problems in the Study of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Guillermo O'Donnell, Phi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eds.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iv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